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 검 토 보 고 서

2024. 4. 12.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 1. 제안경과

- 제안일자 : 2024. 4. 3.
-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여 센터의 보호동물 수용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 농축산지원과

## 3.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이패동 483-1외 2필지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336㎡ → 682㎡(1층 수직증축 공사, 346㎡ 증축)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30%, 시비 70%)

(단위: 천원)

	계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비고
금액	1,000,000	-	920,000	80,000	용역비: 총 사업비의 78%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내용 : 1개층 수직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층별	연면적	설치 시설	주 용도
1층	341㎡	동물 진료실, 격리실, 보호실 3개, 세척실, 물품보관실, 기타시설(화물EL, 계단)	동식물관련시설
2층	341㎡	사무실, 입양상담실, X-ray실, 보호실2개, 화장실, 기타시설(화물EL, 계단)	
합 계	682㎡		

####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기 운영 중인 우리시 동물보호센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기동물 수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개층의 동물보호센터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보호실 2개, X-ray실, 입양상담실, 사무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 계획 중에 있으며, 예상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중 30%인 3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신청 및 선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에는 동물보호센터의 부지 적합성 확보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필수로 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 유기동물의 관리 개선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 선정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1

## '2025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 지침(안)

### I 사업개요(사업안내서)

세부사업명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시·도 자율계정/제주/세종)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24년 6,023	
사업목적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 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원한도 (국비)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 (광역) 국비 16억원 이내, (일반) 국비 6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40	지방비	60~7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합 계	15,080	10,686	15,180	23,470	20,076	계속	
	국 고	4,644	3,526	4,693	7,041	6,023	계속	
	지방비	10,436	7,160	10,487	16,429	14,053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유 청 사무관		044-201-261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4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 지침서 참조							

※ 본 지침서는 2025년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 1. 사업대상자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희망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관련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도는 자체적인 선정기준(사업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동의 여부, 유지보수 및 시설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마련하여 관할 지역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

- 주민반대로 인한 부지 채선정 등 민원방지 및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시·도에서는 아래 요건을 필수적으로 포함,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필수요건) ①부지확보, ②사업계획수립(지자체장 결재), ③신축(기존 보호시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지역의 마을주민총회 등 (찬성의결), ④공유재산심의회, ⑤영향평가, ⑥지방재정투자심사, ⑦법적 제한사항 검토(행위·허가 제한사항, 토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의결된 경우 해당(다만 추가 협의 후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의결)로 선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한강수계법 등

※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업 신청한 경우, 농식품부 평가 의견(기재부 제출)에 ‘감액 및 사업신청 부적절’ 등 부정적 의견 제시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한 시·군은 사업 종료 후 2년간 동 사업 신청 불가(기존 시설 개보수 등의 경우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3.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 지자체 직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비용

\* 증축 및 시설 개·보수 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포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

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⑦ 생략

##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시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부개정 2022.9.19.>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

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부개정 2022.9.19.>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의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



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